



새가구, 인체유해물질 환경마크로 해결하세요

최근 언론보도에서 새가구에서 방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포름알데히드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실시한 생활가구의 유해물질 방출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가구 구입 소비자의 43.6%가 눈이나 목이 따가운 이상 증세를 경험하였고, 87.5%의 소비자가 자극성 냄새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구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친환경 가구에 대해 2003년부터 환경마크가 부여되고 있다.

환경마크란 동일용도의 제품 가운데에서 생산·소비·폐기 등 제품의 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 및 인체유해 물질을 덜 배출하고, 에너지 및 자원을 절약 할 수 있으면서도 품질도 좋은 제품에 인증하는 마크이다.

환경마크 인증기준은 대상제품의 환경성 및 품질 등이 상위 30%에 해당하는 제품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사무용가구, 붙박이가구, 침대, 실내 바닥재 등이 인증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가구품목에 대해서 현재 59개 업체 572개 제품에 대해 환경마크 인증이 부여되고 있으며, 작

년에 비해 두배이상 인증제품이 증가하고 있다.

환경마크를 인증받은 가구의 경우 VOCs 및 포름알데히드가 시중제품 보다 훨씬 덜 방출되며, 이외에 납, 수은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도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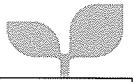
환경마크 가구생산 업체 L사의 경우, 자사 신규 생산 제품은 환경마크 기준에 맞춰 생산하여 친환경 종합가구 판매를 주도하고 있다. 이에 동사는 최근 소비자 웰빙지수 조사(표준협회)에서 주방가구와 가정용가구가 1위를 차지했다.

이에 친환경상품진흥원은 가구류 가운데 아직 인증기준이 마련 되어있지 않은 제품 중 제품의 환경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제품 등을 우선적으로 선별해 지속적으로 인증기준을 제정하여 다양한 친환경상품을 보급할 예정이다.

친환경상품진흥원은 앞으로도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소비 촉진을 위해 친환경상품정보 제공 및 각종 홍보·교육 활동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생활 문화정착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양부, 어장관리법 개정 정부안 확정

어업인들이 어업활동 중 그물이나 밧줄 등 폐어구 및 양식시설물을 함부로 바다에 버리거나



어장에 방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어구 등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장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어장 관리법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6월 4일 국무회의 심의를 마치고 지난 7월달 중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업인들이 어장에 부표(bouy, 일정한 위치에 고정되어 떠있는 물체로 물속에 잠겨있는 물체의 위치를 알려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한 규격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해 어장환경을 보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제를 도입해 업체의 무분별한 영업행위를 막고, 민간이 대행하고 있는 어장정화·정비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기술인력과 자본금 및 시설·장비를 갖춘 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등록업체가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관리체제를 강화했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간 집중 조업으로 탈락된 어구 등이 바닥에 쌓여 수산생물의 산란장 및 서식환경을 악화시켜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폐그물, 폐어망, 닛 등 폐어구에 대한 수거사업을 우선 실시토록 했다.

폐어구 수거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선이 조업활동 중에 폐어구를 수거한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어장정화사업을 실시할 때 그 경비의 일부를 어업권자가 부담토록 하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영세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다.

이밖에 어장관리시행계획의 수립·추진이나 어장정화사업 실시 등에 있어 시·도지사 외 시장·군수·구청장의 공동권한을 시장·군수·

구청장으로 일원화해 보다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청, 무분별한 산지개발 방지키로

산림청은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자연친화적인 산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지난해말 현재 산림면적은 639만 4천ha이다. 이는 2004년말 640만 301ha에 비해 0.1%(6천 352ha)가 감소한 수준. 산림면적이 이렇게 감소한 이유는 산지가 각종 개발로 인하여 타용도로 전용되기 때문이다. 작년도 산지의 타용도 전용은 9,013ha로 이는 전년도에 비해 13%가 증가한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산지의 타용도 전용현황(허가기준)을 보면 여의도의 10배 규모인 연평균 7,884ha며 도로 1,635ha, 택지 1,428ha, 공장 1,135ha 등의 순으로 전용되고 있다.

지난해 전용현황(허가기준)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2,350ha, 경북 1,146ha, 충남 973ha 등의 순으로 개발 수요가 많은 수도권지역이 가장 전용이 많았다. 산지 구분별로는 보전산지에서 23%, 준보전산지에서 77%가 전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지전용지는 중간복구제도를 도입, 훼손지가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를 방지하는 한편 불법행위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해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그 동안 산지관리법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 이를 개선키로 했다"면서

“산지전용시 복구가 어렵거나 경관 훼손이 심한 지역은 산지전용이나 채석을 제한하고 채석을 단지화해 소규모 채석에 따른 경관 훼손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자연학습관찰원 조성 마무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박대문)는 부지내 26만평의 야생화단지내에 지난해 9월 시작한 5만평 규모의 자연학습관찰원 조성을 마무리하였다.

야생화단지 조성은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사업의 첫단계 사업으로 2008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데, 2005년 초에 2만평 규모의 야생초화원 조성이 이미 끝나고, 이번에 두 번째로 자연학습관찰원이 결실을 보게 되었으며, 앞으로 생태환경체험지구와 습지관찰지구 등을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에 완성된 자연학습관찰원은 크게 식용·섬유·약용·향신료·염료·밀원(蜜源)·관상 등의 자원식물원과 봄·여름·가을·겨울의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경관정원, 또한 각 수목의 종류와 생육상태를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는 수림대로 구분되며, 전체 15개 테마정원에 총 310종 22만그루의 우리나라 대표식물을 식재되었다.

테마별로는 살구 등 유실수가 열리는 ‘주렁주렁 열매원’, 도라지·돌나물 등 ‘아낌없이 주는 원’, 둥글레·감국 등 ‘약이되는 식물원’, 메밀·싸리나무 등 ‘벌이나는 꿀원’, 동백나무·꽃향유 등 ‘기름나는 식물원’, 그리고 향나무, 백리향 등 ‘향기솔솔원’, 목화·자작나무 등 ‘섬유가되는 식물원’, 봉선화·물푸레나무 등 ‘알록달록 물드는원’, 구상나무·홍단풍 등 ‘보고즐

기는 나무원’, 금낭화·기린초 등 ‘색색가지 들꽃원’, 그 외 ‘늘푸른 나무원’, ‘사계절 정원’, ‘생태식재모델원’, ‘어린이학습원’, ‘심고 가꾸는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약이되는 식물원’에는 약재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식물 83종을 식재하였고, ‘어린이학습원’에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우리가 알아야할 50가지 나무를 볼 수 있으며, ‘심고 가꾸는원’에서는 청소년과 일반인들이 직접 식물 재배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다양한 학습과 체험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공사 양재홍 공원개발처장은 “자연학습관찰원은 살아있는 식물도감으로서, 310종 식물전체에 대하여 이름과 특성을 수록한 표찰을 달았으며, 자라나는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체험교육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매립지의 생태이미지 제고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여름 피서지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

환경부에서는 국민들이 여름휴가를 쾌적한 환경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해수욕장, 산, 계곡 등 전국 피서지에 대한 쓰레기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주요 대책으로는 피서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처리하고, 무단투기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는 한편, 피서객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친환경적 피서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피서지별로 청소년력 및 장비 확충 등 비상청소체계를 구축하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등 수거체계를 정비하며,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 및 자율청소시간(Clean-Up Time)을 정해 피서객의 자발



적 청소활동을 유도하게 된다.

또한, 피서차량으로 정체가 예상되는 도로변 및 피서지 곳곳에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하고 무단투기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피서지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서지를 찾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대국민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토록 하였으며, 피서지에서는 적당량의 음식을 준비하는 등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쓰레기는 피서지별로 관리소가 정한 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과, 피서길에는 쓰레기를 모아서 일정한 장소에 마련된 쓰레기통에 버리고 도로변에 담배꽂초 등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이번대책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공원 및 도로관리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에서는 피서지 및 도로별 현장대책을 마련하여 추진(7~8월)하게 되며, 환경부에서는 전국 주요 피서지에 대한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실태를 현장평가하여 미비한 경우 곧바로 개선토록 현장에서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를 보면, 피서지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수거·처리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관리가 어려운 취약시간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등 무분별한 행락질서에 대한 언론의 지적이 있었다.

온실가스, 국제표준지침에 따라 산정하고 줄이세요

기업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을 산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얻은 온실가스 제거량을 검증하기 위한 국제 표준화된 틀이 마련되

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최갑홍)은 기후변화관련 국제표준규격에 대해 지난 3개월간 국내 산업계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한국표준심의회 환경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KS)으로 최종 확정고시 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관련 국제표준규격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2002년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44개국 175명의 전문가들이 8차례의 국제회의를 통하여 제정되었는데, 기업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고 있는지 산정하기 위한 지침(KS A ISO 14064-1)과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실행하는데 요구되는 원칙과 절차(KS A ISO 14064-2), 그리고 기업이 선언한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을 평가하고 검증하는데 필요한 사항(KS A ISO 14064-3) 등 3개의 규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정된 KS 규격은 산자부 에너지환경팀 및 에너지관리공단 등 관련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을 위한 기본 지침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ISO 규격의 국내 도입을 추진한 조덕호 바이오환경표준팀장은 “제정된 KS 규격을 우리 기업들과 관련 검증기관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규격 해설서를 만들고 전국 순회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표준화기구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관련 3개의 규격 이외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을 검증하는 기관의 자격요구사항에 대한 규격(ISO 14065)을 제정 중에 있으며 이 규격은 내년 초에 완성될 예정이다. 기술표준원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 검증기관의 자격요구사항에 대한 규격 제정과정에서도 국내 의견을 적극 반영시키는 한편,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도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